
2023 기후위기 인식 조사 보고서

2023 기후위기 인식 조사

I. 조사개요

01 조사개요

01 조사 목적

기후위기와 기후정책 관련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02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제 21대 국회의원 299명 (* 2023년 4월 3일 기준 의석수)

조사 방법 : 대면 및 이메일조사

표본 추출 : 전수조사

표본 규모 : 101명 (대면 97명, 이메일 4명)

조사 기간 : 23.4.3 ~ 23.4.7 (대면) / 23.4.10 ~ 23.4.14 (이메일)

조사 주최 단체 :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빅웨이브

03 조사 내용

- 기후위기 중요도
- 기후위기 경제위기 판단 동의도 / 동의하는 이유 / 동의하지 않는 이유
- 인권위원회 의견표명 동의도 / 기후위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권문제 / 동의하지 않는 이유
- 제21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 역할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조정
- 우리나라 NDC 인식
- 기후위기 대응 기여 활동 및 근거
- 향후 계획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기여 활동

01 조사개요

04 응답자 특성

| | | 사례수 | 비율 |
|-----------|--------|------------|--------------|
| | | 명 | (%) |
| 전체 | | 101 | 100.0 |
| 성별 | 남성 | 84 | 83.2 |
| | 여성 | 17 | 16.8 |
| 연령 | 30대 | 8 | 7.9 |
| | 40대 | 13 | 12.9 |
| | 50대 | 35 | 34.7 |
| | 60대 | 43 | 42.6 |
| | 70세 이상 | 2 | 2.0 |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63 | 62.4 |
| | 국민의힘 | 33 | 32.7 |
| | 정의당 | 2 | 2.0 |
| | 기본소득당 | 1 | 1.0 |
| | 시대전환 | 1 | 1.0 |
| | 무소속 | 1 | 1.0 |
| | 당선횟수 | 초선 | 61 |
| 재선 | 23 | 22.8 | |
| 3선 | 12 | 11.9 | |
| 4선이상 | 5 | 5.0 | |

| | | 사례수 |
|---------|-----------------|-----|
| | | 명 |
|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7 |
| | 법제사법위원회 | 8 |
| | 정무위원회 | 7 |
| | 기획재정위원회 | 9 |
| | 교육위원회 | 8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6 |
| | 외교통일위원회 | 5 |
| | 국방위원회 | 4 |
| | 행정안전위원회 | 8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0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5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2 |
| | 보건복지위원회 | 5 |
| | 환경노동위원회 | 5 |
| | 국토교통위원회 | 9 |
| | 정보위원회 | 3 |
| 상설특별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5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6 |
| 특별위원회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 8 |

2023 기후위기 인식 조사

II. 조사요약

01 조사요약

01 기후위기 중요도

- 의원 80.2%가 기후위기 대응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높게 평가

02 기후위기 경제위기 판단 동의도

- 의원 99.0%가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라는 판단에 동의

02-1 기후위기 경제위기 동의하는 이유

- (1+2순위 기준) 의원 75.0%가 동의하는 이유로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위기 및 시장 불안정을 선택

02-2 기후위기 경제위기 동의하지 않는 이유

- 한 명의 의원이 "기후위기가 경제적 영향은 끼치고 있으나 근본적 원인은 아니다." 라고 답함

03 인권위원회 의견표명 동의도

- 의원 93.1%가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동의

03-1 기후위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권문제

- (1+2순위 기준) 의원 83.0%가 기후재난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불평등 심화를 우려
- (1순위 기준) 의원 53.2%가 기후위기 심화로 미래세대 생존권 위협을 우려

03-2 동의하지 않는 이유

- 동의하지 않는 7명 의원 모두 기후위기가 인권과 관련성이 적음을 이유로 선택

01 조사요약

04 제21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 역할

- 의원 78.2%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우선적 역할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법률 제·개정을 응답(1+2순위 기준)

05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조정

- 의원 73.3%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하향 조정이 불충분

06 우리나라 NDC 인식

- 현재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9.5% 충분 vs 50.5% 불충분

07 기후위기 대응 기여 활동 및 근거

- 탄소중립위원회 활동, 기후위기 관련 법안 발의 및 개정, 국정감사 기후위기 관련 대책 건의, 기후위기 관련 연구, 회원 활동, 기후위기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시민 대상 기후위기 관련 강의 및 캠페인을 주로 언급
- 이유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입법 반영, 경각심을 지닐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강조, 공론화, 입법을 통한 제도화 목적, 정책 토론 및 의제 발굴, 중요성 강조, 문제 개선 방안 모색, 시민사회 참여 유도, 지역사회 인식 전환이라 답변함

08 향후 계획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기여 활동

- 특별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포럼 활동 및 지역구 활동
- 재생에너지 정책 촉구 및 추진, 개발사업 감시
- 기후위기 대응 위한 정책 질의
-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안 발의
- 토론회 및 강연, 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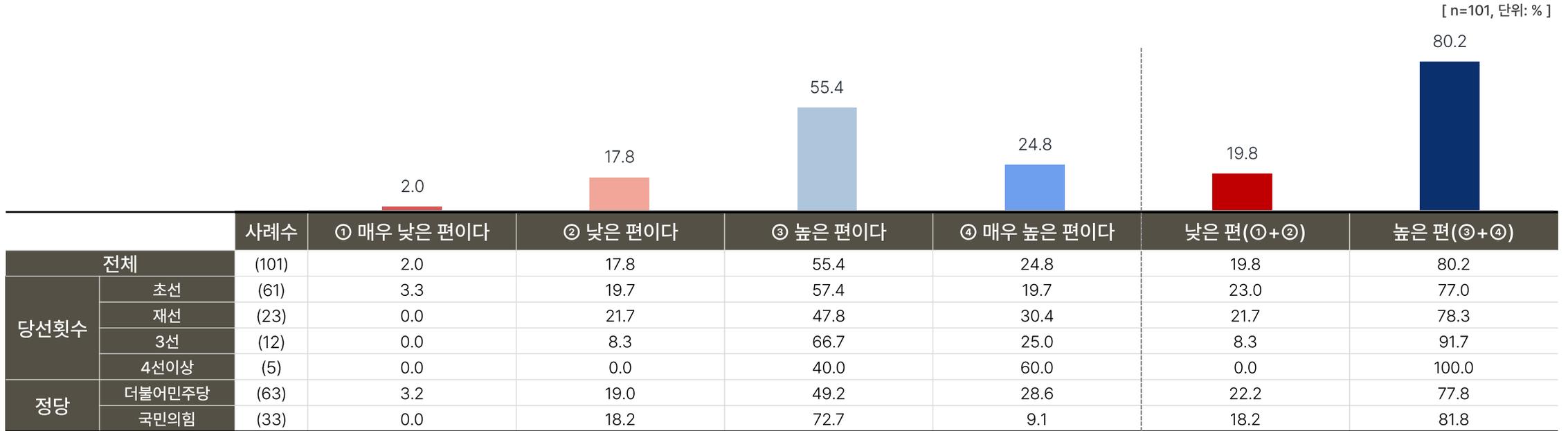
2023 기후위기 인식 조사

Ⅲ. 조사결과

01 기후위기 중요도

Q.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기후위기 대응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다수가 의정활동에 기후위기 대응 중요도를 높게 평가함(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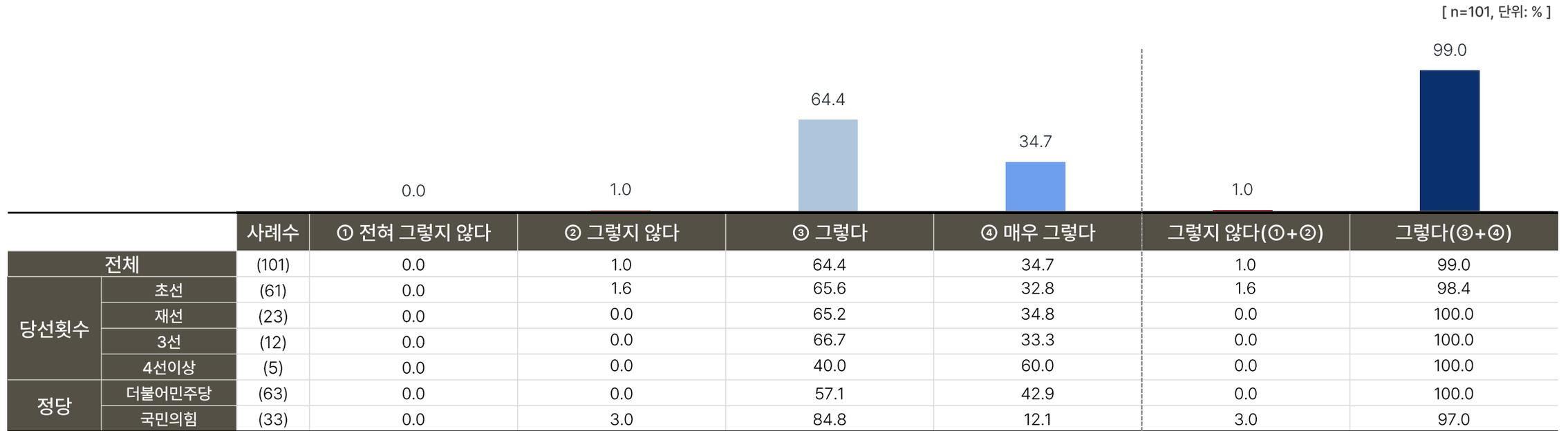


- 응답자 특성별로 대부분의 집단에서 기후위기 대응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가운데 50대(91.4%) 연령층에서 특히 높은 비율로 집계됨
-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77.8%)이 국민의힘(81.8%) 대비 소폭 낮게 평가함
- 상임위원회 소속별로는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소속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속으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속해있다고 응답한 의원 모두(100.0%)가 기후위기 대응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높게 봄

02 기후위기 경제위기 판단 동의도

Q. 그럼, 의원님께서서는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라는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거의 모든 의원이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라는 판단에 동의(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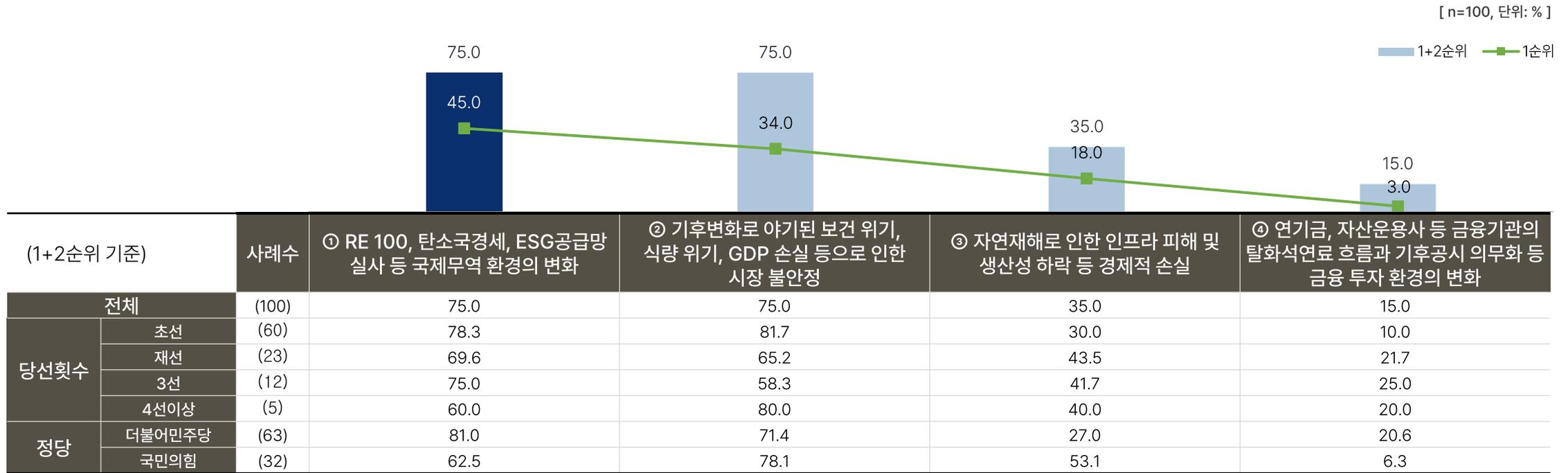


-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라는 판단에 대해 1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은 의원은 그 이유로 "기후위기가 경제적 영향은 끼치고 있으나 근본적 원인은 아니다." 라고 답함

02-1 기후위기 경제위기 동의하는 이유

Q. (문2-㉔, ㉕ 응답자만) 기후위기가 경제위기임에 동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____, 2순위____)

기후위기가 경제위기임에 동의하는 이유,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기후위기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동률(75.0%)



- 기후위기가 경제위기임에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 1+2순위 기준 RE 100, 탄소국경세, ESG공급망 실사 등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기후변화로 야기된 보건 위기, 식량 위기, GDP 손실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동률(75.0%)로 집계. 1순위 기준은 국제무역 환경 변화(45.0%)가 위기 및 시장 불안정(34.0%)대비 높게 나타나며 소폭의 차이 관측
- 이어 자연재해로 인한 인프라 피해 및 생산성 하락 등 경제적 손실(35.0%),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탈화석연료 흐름과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금융 투자 환경의 변화(15.0%) 순으로 조사됨

03 인권위원회 의견표명 동의도

Q. 최근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게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표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93.1%가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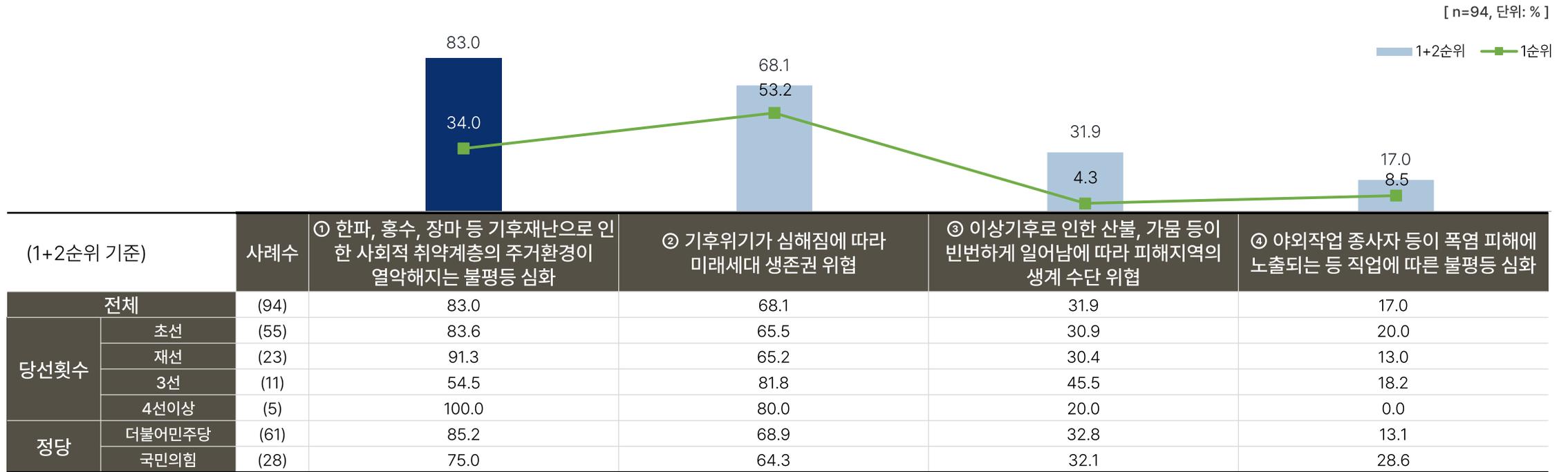


- 대부분의 응답자 집단에서 인권위원회의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 표명에 대해 동의함
- 한편, 비동의 비율은 소속 정당별로 국민의힘(15.2%)에서 비교적 높게 집계됨
- 동의하지 않는 의원 7명은 모두 '기후위기와 인권의 관련성이 적음'을 이유로 선택함

03-1 기후위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권문제

Q. (문3-㉓, ㉔ 응답자만) 동의하신다면 기후위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____, 2순위____)

기후위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권 문제, 기후재난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불평등 심화(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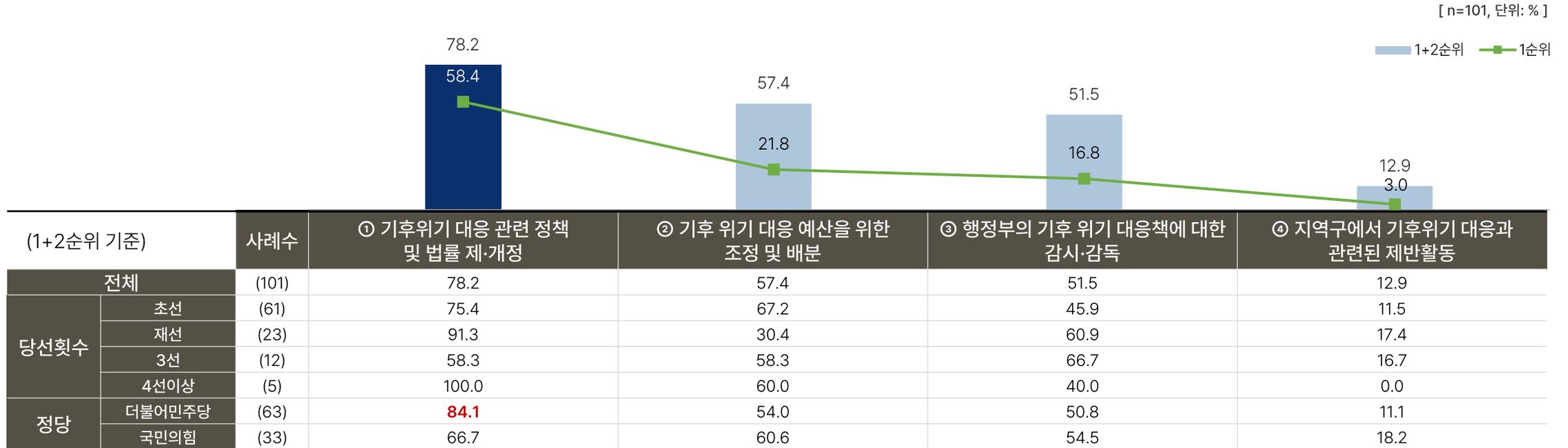


- 기후위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1+2순위 기준 한파, 홍수, 장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불평등 심화가 8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순위 기준으로는 기후위기가 심해짐에 따라 미래세대 생존권 위협이 가장 높은 비율로 집계되며 차이를 보임
- 이어 기후위기가 심해짐에 따라 미래세대 생존권 위협(68.1%),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가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피해지역의 생계 수단 위협(31.9%), 야외작업 종사자 등이 폭염 피해에 노출되는 등 직업에 따른 불평등 심화(17.0%)순

04 제21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 역할

Q. 의원님께서 제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____, 2순위____)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우선적 역할,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법률 제·개정(7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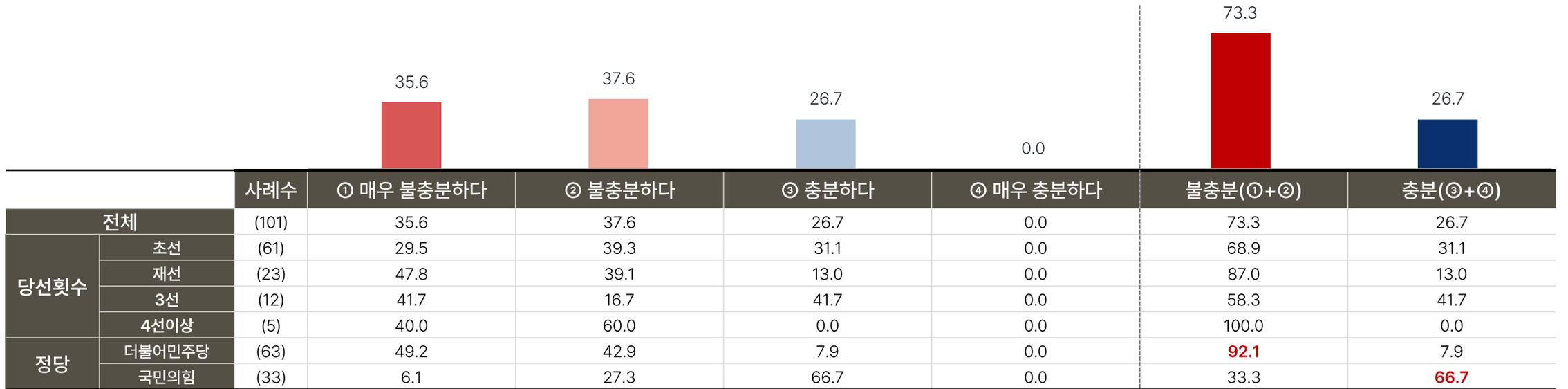
- 제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1+2순위 기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법률 제·개정이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순위 기준 역시 동일함
- 이어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을 위한 조정 및 배분(57.4%), 행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책에 대한 감시·감독(51.5%), 지역구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반활동(12.9%)순으로 집계
-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및 법률 제·개정(84.1%)을, 국민의힘은 예산 조정 및 배분(60.6%)을 더 많이 선택함

05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조정

Q. 최근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30.2% → 21.6%)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측면에서 볼 때 의원님은 이러한 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하향 조정, 불충분 73.3%

[n=1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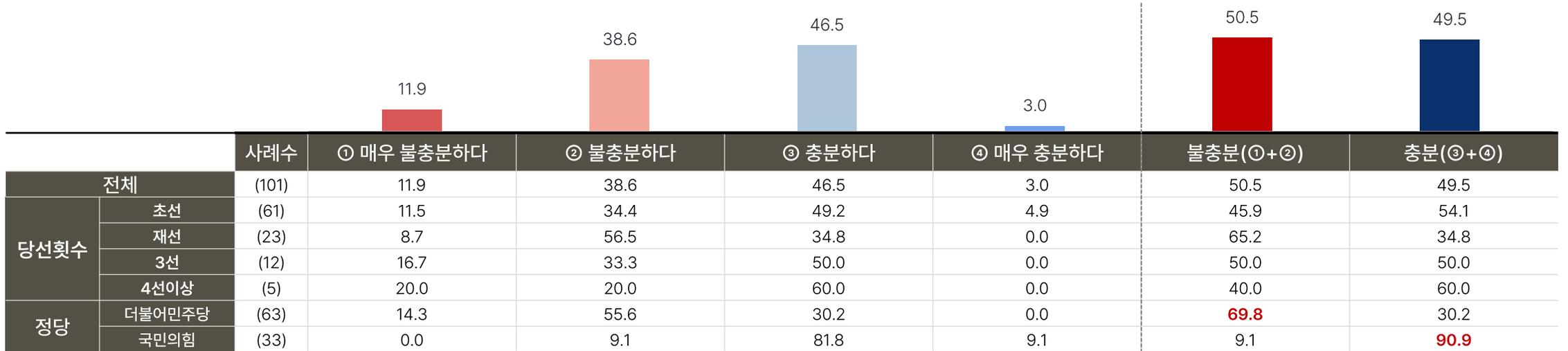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73.3%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에서 92.1%인 반면 국민의힘은 33.3% 수준, 소속 정당 별 의견 차이 관측
- 세부 소속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속해있다고 응답한 의원 모두(100.0%)가 불충분하다고 봄

06 우리나라 NDC 인식

Q.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 40% 감축)에 대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분(49.5%)과 불충분(50.5%) 팽팽

[n=101, 단위: %]



- 현재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충분하다(49.5%)와 불충분하다(50.5%)가 팽팽
-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에서 69.8%인 반면 국민의힘은 9.1%에 불과, 소속 정당 별 의견 차이 관측

07 기후위기 대응 기여 활동 및 근거

Q. 제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의원님께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한 대표적인 의정 활동 세가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정활동의 간략한 내용과 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의정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출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위기 대응 기여 의정 활동 |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
|------------------------|------------------------------------|
| 탄소중립위원회 활동 | 정부 탄소 중립 관련 정책 점검 및 토론 |
| 기후위기 관련 법안 발의 및 개정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입법 반영 |
| 국정감사 기후위기 관련 대책 건의 | 경각심을 지닐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강조 |
| 기후위기 관련 연구, 회원 활동 | 공론화, 입법을 통한 제도화 목적 |
| 기후위기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 정책 토론 및 의제 발굴, 중요성 강조, 문제 개선 방안 모색 |
| 시민 대상 기후위기 관련 강의 및 캠페인 | 시민사회 참여 유도, 지역사회 인식 전환 |

- 주관식 답변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했다고 응답한 의원은 35명이었으며, 향후 대응활동을 하겠다고 응답한 의원은 29명으로 나타남
-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한 대표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 기후위기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정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21명).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안이 언급된 가운데 탄소, 미세먼지, 풍력,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안은 특히 여러 의원실에서 중복 언급됨
- 탄소중립위원회 활동 수행 중이라는 의원 다수. 그 외 연구, 포럼 등 기후위기 관련 이슈를 공론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질의, 제안 촉구 등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여 정부 기관이 경각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함
- 그 외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강의, 캠페인 등을 시행하여 일반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수의 의원이 시행하고 있음. 시민 대상으로 한 활동으로는 놀탄 컨퍼런스, 924 기후정의 행진, 세상을 바꿀 대화, 기후정의버스가 언급됨

08 향후 계획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기여 활동

Q. 제21대 국회 후반기 동안 의원실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대표적인 의정 활동이 있다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등 포럼 활동 및 지역구 활동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탄소중립위원회
- 탄소 중립 정책 간담회
- 지역위원회, 간담회,
지역구 기후아카데미
- 국회 포럼 참여
(기후변화, 수소경제, 환경, 1.5)
- 국회 그린뉴딜 연구회
- 소상공인위원회



재생에너지 정책 촉구 및 추진, 개발사업 감시

- 목표, 신안 해상풍력산업 추진
- 에너지 전환 및 가격정책 개입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 국내 외 개발사업(지리산 산악열차,
수출입은행) 감시 및 감독
- 한국투자공사 등의 석탄 투자 철회
- 재생에너지 의무 구매,
송배전망 우선 접속 법안 발의
- 민간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법안 준비



기후위기 대응 위한 정책 질의

- NDC 목표 상향 위한 정책 질의
-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생명권 해석
범위에 대한 제언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질의, 국정감사
- 기후변화 관련 의제 지속 발굴 및
정부 정책 개선 요구
- 지역과 국가의 기후관련 정책, 예산,
법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안 발의

- 탄소세
- 황재세
- 시멘트 지역자원 시설세
- 탄소중립산업법
- 풍력발전조급 촉진 특별법
- 공적자금 ESG 투자 활성화법
- 친환경차 지원법
- 수소 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 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토론회 및 강연, 세미나 개최

- 항공산업 ESG 현황 및 제도 개선
- 노동자 처우
- SDGS
- 기후재난 대응
- RE100 필요성
- 낙동강의 녹조류 대응
- 기후아카데미